

산림조합중앙회, 창립 60주년 맞아 공공역할 강화 가속도



1

산림조합중앙회와 전국 142개 산림조합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과 숲을 푸르게 가꾸는 데 일조해 왔다. 또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고자 '사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경영 혁신을 꾀했다.

60주년을 앞둔 지금 산주와 임업인, 나아가 국민 모두의 조합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사업 분야별 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내 유일의 임업 전문 금융기관인 S산림조합 상호금융은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금융업 경력이 30년 정도 짧은 데다 금융망이 협소해 부채 산주와 귀산촌 희망인 등 잠재 임업인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쉽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 조합만 할 수 있는 상호 금융업을 중앙회와 조합이 공동 수행해 금융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로부터 임업 기술 지도 전반을 위탁받아 산주와 임업인에게 양묘, 조림, 숲 가꾸기에 관한 산림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도 산림조합중앙회의 주요 현안으로 삼았다.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 보조율이 1982년 80%에서 현재 25% 수준으로 크게 줄면서 사업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산주와 임업인에게 양질의 산림 경영 지도와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국회와 재정 당국에 지도원 인건비 보조율을 현실화할 것을 건의하는 등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익형 임업 직접 지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주와 임업인 등의 권익을 높이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고자 직불금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 소득이 같은 1차 산업군에 속하는 농가와 어가와 비교해 가장 낮은데도 소득 지원 제도가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최근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 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제도 도입의 첫발을 내디뎠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 의결 일정까지 산림청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임업계의 오랜 염원인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36만 명이 서명한 '산림 분야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청원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업 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오는 2022년 5월 18일 산림조합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임업인과 조합원은 물론, 국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산림사업 중추 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❶



2

1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2 산림조합중앙회 청사 전경